

# 전주시의회 의원 4명, 5분발언 나서

천서영 의원, 생활인구 확대 정책 필요 절실  
최명권 의원, 도로건설·관리계획 대전환 촉구  
박형배 의원, 지방교부세 삭감 문제 대응 요구  
은혜정 의원, 동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주장



천서영 의원 최명권 의원 박형배 의원 은혜정 의원

1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 속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전주시 인구는 65만에서 점점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천 의원은 "외국인 정착 및 체류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전주 인구 중심이 아닌 생활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명권(송천동) 의원은 "전주시의

효율적인 도로 건설과 관리를 위해 도로 건설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재정비,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도로체계 개편과 스마트 도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교통 수단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개선을 통해 도시의 문화와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배(효자5동)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문제에 대해 전주시장과 시의정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

다. 박 의원은 "정부의 2023년 국가재정 결산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18조6000억원이나 감액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원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는 지방 재정 및 경제 죽이기에 다름없다"며 "전주시장과 시의정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를 옥죄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혜정(우아·2, 호성동) 의원은

균형적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전주 동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은 의원은 "만여 배후인구를 가진 우아동·호성동·인후1,2동 주민들은 스포츠복합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체육시설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지도서관 인근 시유지에 체육센터가 건립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국희 기자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16일 센터 세미나실에서 전주권 6개 청소년센터와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협력

전주시자원봉사센터, 6개 청소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16일 센터 세미나실에서 전주권 6개 청소년센터와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순내 청소년센터(센터장 김관우) △덕진청소년센터(센터장 안이순) △완산청소년센터(센터장 김법안) 등 6곳이다. 이 자리에서 참여기관들은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방안 모색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관계자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최이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 자원봉사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희 기자

## 전주시 완산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효도 선물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17일부터 23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매출액 규모가 큰 백화점·마트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위생관리 실태 △부당한 표시·광고 △영업신고증 비치 및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점검에서는 제품을 과대 홍보하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제품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품질·위생관리 실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 등 사행성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 홍보하는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국희 기자

##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가져

다양한 의견 청취 위해 마련

전주시는 16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를 협상대상지로 선정한 이후 민간제안자가 협상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의거해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간 제안자가 제

시한 △470미터 높이의 타워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과 쇼핑몰 등의 상업시설 △56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 △문화공원 및 공개공지 조성 △지하차도 조성 △교량 확장 및 신설 △주변도로 확충 △녹지조성 등의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주민설명회와 더불어 개발사업에

따른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인지도 △개발사업 우선 고려사항 △교통 혼잡 문제 해소방안 △지역 상권 상생 방안 △공공기여 시설 및 공개공지 조성시 선호시설 조사 등이다. 시는 이번 주민 의견 청취 결과를 토대로 민간제안자와 협의하고, 향후 의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 및 교통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상세주소 부여

전주시는 모든 시민들이 복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7구 이상 거주 주택과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

물 중 복지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276 곳을 상반기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현장 조사와 건물소유자 등 통보 및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여된 상세주소를 토대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입신고 시 상세주



소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16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등 전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원스톱업무처리 교육도 실시한다. /김국희 기자

## 농식품산업 기업 집중 육성

전주농기센터, 5억900만원 투입 4개 분야 9개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강한 경제 구원을 위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농식품산업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는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농식품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 총 5억 9000만 원을 투입해 4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이뤄진 '2024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농식품 가공업소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지원 △농식품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가공식품 상품화 및 인증지원 △농식품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 및 컨설팅 지원 등 4개 분야에 걸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사업별로는 △창업식품기업 지원사업 △6차산업 돌봄지원사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사업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 △전통식품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 △HACCP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사업(4개 기업, 8000만 원)'과 '가공식품 상품화사업(1개 기업/1100만 원)'의 경우 그간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업으로, 시는 지역 농산물의 활용도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해 기업역량 강화뿐 아니라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도 이끈다는 목표다. 시는 각각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기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기업과의 교류와 소통, 기업간 협업 촉진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김종성 전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성장 기반이 약한 전주시 농식품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김국희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